

# 韓國財政構造와 資本蓄積過程의 相互關聯性에 관한 研究\*

禹 明 東\*\*

## < 目 次 >

- I. 序 論
- II. 分析을 위한 理論的 檢討
- III. 財政構造와 資本蓄積
- IV. 純福祉財政便益과 資本蓄積
- V. 總括的 評價

## I. 序 論

그 동안 우리경제학계, 특히 재정학계에서는 일부논자들에 의해 케인지언의 정통적 논리(Orthodox Keynesian Perspective)에 바탕을 둔 財政分析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財政支出의 生産性, 再生産性, 나아가서 租稅과 蓄積과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왔다.<sup>1)</sup>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대부

\* 本 論文은 1992년 성신여자대학교의 學術研究助成費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1993년 2월 韓國經濟學會에서 발표되었던 것을 修正補完한 것임. 학술발표회에서 많은 오류와 개선점을 상세하게 논평해주신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진수박사님,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본 학회지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誠信女子大學校 經濟學科 副教授

1) 이 분야에 관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先行研究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재은교수는 “현대자본주의의 구조변화와 재정위기의 진전”, 『재정논집』, 제2집, 한국재정학회, 1988에서 재정위기론의 관점에서 서술적인 정리를 하고 있다.

조원희교수는 석사논문, “자본축적과 경기순환에 있어서 국가재정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서울대학교학원, 1982와 이 논문을 발전시킨 박사논문, *Value-theoretic Approach to the Dynamics of Competition, Monopoly-Capital and the State*, Univ. of London, 1990에서 이 분야에 관한 이론을 비판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조연상교수는 “한국 재정적자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제5집, 한국재정학회, 1991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은 이론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재정지출 또는 조세체계 등에 대한 개별적인 논의에 그쳐, 그러한 이론적인 전개가 우리사회현실의 축적과정과의 관련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밝혀주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식하에 기존의 이론적인 논의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그러한 이론적인 논의의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자료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구조를 밝히고, 일반적인 이론적인 논의가 7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財政構造와 蓄積過程과의 관계속에서 우리社會經濟構造의 설명에 얼마나 설명력을 갖는가를 검토하고, 나아가서 일반적인 이론적 틀이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까지 분석을 전개시켜보고자 한다.

## II. 分析을 위한 理論的 檢討

재정지출과 조세징수의 생산적인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복지후생에 관한 국가지출의 생산적 성격여부와 노동에 대한 조세가 勞動力價值로부터 나오는가 아니면 剩餘價值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 이 문제의 파악은 노동력가치를 어떻게 규정짓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크게 서로 다른 두가지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K.Marx와 그의 전통을 이어 받은 Orthodox Marxist, Fundamentalist들은 노동력가치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임금으로 실제로 구입한 상품들, 즉 可變資本과 교환되는 과정에서 받는 純賃金과 일치하게 된다고 보고, Marx의 제2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은 화폐 또는 현물적 편익으로서 노동자의 수입은 될지언정 노동력의 가치는 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이 지출은 勞動力의 再生産費를 떨어뜨리지 못하고 결국 자본의 잉여가치 취득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sup>2)</sup> 한편 이들은 (순)임금의 가치는 노동력가치 수준으

2) Marx도 '정상적인 형태라는 것은 노동력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전제로 한다'(Capital, Vol.3, p.832, B.Fine & L.Harris, "State Expenditure in Advanced Capitalism: A Critique", NLR, No.98, 1976, p.106 재인용)고 하고 있으며, Fine & Harris도 '...임금수입은 노동력의 가치와 같고 순임금가치는 노동력가치 이하로 영원히 떨어질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ibid, p.106). 또한 D.Yaffe도 '비록 사회적 서비스에 많은 정부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은 총이윤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가변자본을 구성하는 것은 생산적 노동자의 실질임금일 따름이다'고 주장하고 있다(D.Yaffe, "The Crisis of Profitability", NLR 80, p.573, 조원희, 전개논문, 1990, p.202 재인용).

로 환원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조세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느 곳에 부과되던 궁극적으로는 매우 빠르게 자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잉여가치로부터 지불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결국 모든 조세는 잉여가치에서 나감으로써 조세의 부과는 利潤率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다.<sup>3)</sup>

한편 I.Gough 등은 Orthodox Marxist들이나 Fundamentalist들의 견해와는 달리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노동력의 가치는 고용인구의 個人的 및 集合的 消費에 의하여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노동력의 가치를 자본이 제공하는 순임금(총임금-조세)과 국가가 제공하는 현물서비스와 이전지출을 합한 노동자의 총수입이라고 본다.<sup>4)</sup> 이와 같은 노동력가치에 대한 견해에 바탕을 두고, 軍事 및 集團的 서비스, 社會的 서비스, 社會間接資本서비스와 經濟的 援助 등 그가 분류한 재정지출의 제 형태중에 사회적 서비스부문(제2부문)에 대한 지출은 국가에 의해 집단적으로 제공되는 社會的 賃金(Social Wage)<sup>5)</sup>을 형성하여 자본이 제공하는 순임금(총임금-조세)과 함께 노동력의 가치를 이루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봄으로써 사회적 서비스는 민간자본의 노동력의 재생산비를 떨어뜨림으로써 자본의 잉여가치취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서비스와 경제적 원조부문의 지출은 국가가 생산한 생산수단의 보전과 민간이윤 및 축적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에 사용되

3) Fine & Harris는 전제논문에서 “임금(또는 임금재)에 대한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총임금을 인상시킨다. 따라서 그러한 조세는 사실상 임금메카니즘을 통해 징수되는 자본에 대한 조세이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가치분석에 있어서 모든 조세는 자본에 대한 조세이며 모든 조세수입의 원천은 잉여가치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B.Fine & L.Harris, op.cit., p.106).

Orthodox Marxist들도 국가의 재원은 자본의 소유자에 의해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 중에서 조달된다고 한다. 이들에 의하면 노동자들이 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노동자가 납부하는 것은 잉여가치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잉여가치 중에서 나가는 것으로 본다. J.A.Miller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The orthodox falling rate of profit theorists contend that worker's tax payments are “disguised surplus value.” (J.A.Miller,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Reconsidered: Two Views of the State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in the Postwar Economy, *RRPE*, Vol.18, No.1&2, 1986, p.250).

4) I.Gough,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The Macmillan Press, 1981, 김연명 외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한울, 1990, pp.149-150.

5) 그는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수정하기 위한 그리고 비노동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사용’으로 정의하고(I.Gough, op.cit., p.66),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사회적 서비스를 임금의 필수적 일부분으로서 화폐임금(자본에 의해 지불되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노동운동에 의해 보호되고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이것은 ‘社會的 賃金’이라 했다.(I.Gough, “State Expenditure in Advanced Capitalism”, *NLR*, No.92, 1975, p.75 & I.Gough, op.cit., 1990, pp.140-150의 ‘사회적 임금’항을 참고할 것).

어 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利潤率을 올리게 된다고 보았다. 결국 그는 J.Harrison, R.Rowthorn 등과 함께 위의 두부문은 노동과정의 관점이나 직접적인 잉여가치의 생산이라는 가치의 관점에서는 비생산적이지만, 재생산적 관점에서는 이 재정지출의 대상은 생산수단이나 생활수단으로 재전환되는 노동생산물이므로 간접적으로 생산적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또한 政治經濟學的 財政分析으로 유명한 미국의 Neo-Marxist인 J. O'Connor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sup>6)</sup> 그는 재정지출을 蓄積支出과 正當化支出로 나누고 축적지출은 다시 社會的 投資支出과 社會的 消費支出로 나누어 사회적 투자지출은 불변자본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利潤率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소비지출은 노동비용의 저하를 통해서 민간의 가변자본비용을 떨어뜨림으로서 利潤率을 올리게 된다고 봄으로써 이 두지출은 잉여가치에 간접적으로 생산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O'Connor가 Gough 등과 다른 점은 O'Connor는 사회적 소비지출이 반드시 노동력의 재생산비를 사회화시킨다는 점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sup>7)</sup> Gough는 사회적 서비스지출이 노동자계급의 상대적인 힘이 강한 시기에는 社會的 賃金을 확장시켜 勞動力再生産費를 줄이는데 실패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sup>8)</sup>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국가지출의 규모와 방향은 제계급의 세력균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9)</sup>

이들은 전술한 노동력의 가치에 대한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자본에 대한 조세는 잉여가치로부터 나오지만 노동에 대한 조세는 노동력의 가치(가변자본)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만약 국가의 비용이 가계부문, 특히 광범위한 노동계급에 의해 부담될 수 있다면 국가지출의 팽창은 반드시 잉여가

6) J.O'Connor의 主著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St. Martin's Press, 1973(우명동역, 『현대국가의 재정위기』, 이론과 실천, 1990)는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현대자본주의의 재정현상을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저서로서, R.Goldscheid를 시발로 한 이 분야에 대한 그 이전의 모든 논의는 그의 이론에 흡수되고 있으며 그 이후의 많은 연구가들의 논의는 그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의 대강은 禹明東, 『國家財政危機現象에 대한 理論的 檢討』, 『退耕趙容範博士華甲紀念論叢』, 풀빛, 1991을 참고할 것.

7) O'Connor는 전계서에 대한 Mosley의 비판에 답하는 자리에서 이 점을 다시금 분명히 하고 있다. "Some Reflective Criticisms on Mosley'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RRPE*, Vol.11, No.3, 1979, p.63.

8) I.Gough, op.cit., 1990, pp.113-115.

9) ibid., p.161.

치와 資本蓄積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결국 Gough는 현실세계에서 과세의 최종부담은 계급갈등이라는 역학관계에 의하여 결정되고, 상쟁하는 계급의 경제적 및 사회적 세력에 따라 변동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sup>10)</sup> O'Connor도 Gough와 마찬가지로 勞動에 대한 租稅를 可變資本에 대한 租稅로, 資本에 대한 租稅를 剩餘價値에 대한 租稅로 봄으로써, 노동에 대한 조세는 가변자본에 귀착하여 잠재적으로 축적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이 분야에 관한 다양한 實證分析을 시도하고 있는 Miller는 재정지출을 生産性과 再生産性이라는 두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분류하고 있다.<sup>11)</sup> 먼저 국가지출의 生産性이라는 관점에서 첫째, 국가지출이 시장에서 판매되며 가치를 갖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쓰이느냐 둘째, 국가지출이 자본주의의 생산적 부문에서 직접 자본의 통제하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쓰이느냐를 기준으로 국가지출을 민간으로부터의 정부구입,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이전지출 등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민간으로부터 정부구입만을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생산적인 지출로 보았으며, 나머지 두가지 지출은 잉여가치에 대해 비생산적이라고 하였다.<sup>12)</sup> 한편 그는 국가지출의 再生産性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지출이 다음기의 생산을 위한 자본 또는 노동을 재생산하는 데 쓰이는 지출, 결국 성공적인 자본의 축적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지출인가 아닌가에 따라 資本再生産的 支出, 勞動再生産的 支出, 非再生産的 支出로 나누고 있다. 자본재생산적 지출은 위와 같은 재생산성의 기준을 충족시켜 민간자본의 생산비용을 떨어뜨려 민간부문의 利潤率을 높여주는 지출을 말하며, 노동재생산적 지출은 노동비용을 줄여주어 利潤率을 올려주는 지출을 말한다. 그의 이러한 구분은 Gough의 사회간접자본서비스와 경제적 원조, 사회적 서비스의 구분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Miller도 Gough처럼 자본에 대해 재생산적인 지출은 모두 민간의 자본비용을 줄여주지만, 노동에 재생산적인 지출은 임금투쟁에 의한 임금상승요인 때문에 모두 민간자본이 부담하는 노동비용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sup>13)</sup> 조세에 대해 그는 O'Connor 등이 생산적 노동과 비

10) *ibid.*

11) J.A.Miller, *op.cit.*, 1986, pp.248-250의 내용을 참고.

12) Stephen Rose, "On Classifying State Expenditure", *RRPE*, Vol.9, No.4, 1977, p.40에 서도 이미 이와 같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13) J.A.Miller, *op.cit.*, p.249-250.

생산적 노동의 구분을 무시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조세를 모두 가변자본에 대한 조세로 보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에 대한 조세를 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와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로 구분하였다. 즉 그는 생산부문의 노동자들의 임금만이 가변자본을 구성하므로, 생산부문의 노동자들에 대한 조세만이 가변자본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비생산부문의 노동자들은 다같이 임금을 받기는 해도 가치를 변화시키지 못하여 가변자본을 구성하지 못하므로,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는 잉여가치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이러한 조세는 민간자본의 이윤을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하였다.<sup>14)</sup> 나아가서 Miller도 Gough처럼 재정지출의 재원은 자본과 노동으로부터 조달되며 그들 사이의 상대적인 부담의 크기는 계급간의 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5)</sup>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Miller 등은 국가재정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분배상의 실질적 편익은 노동자들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출로부터 받는 社會的 賃金支出만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회적 임금지출에서 勞動에 대한 租稅를 공제한 소위 純社會的 賃金(Net Social Wage)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sup>16)17)</sup>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든 축적이론도 재정지출, 조세구조를 별도로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純社會的 賃金과의 관련속에서 해명해야 된다고 하였다. 즉 純社會的 賃金이 늘어나면 그것이 이윤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결국 경가후퇴를 촉진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sup>18)</sup>

이제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實證分析을 함에 있어서는, 이론적

14) *ibid.*, p.250.

15) *ibid.*, p.251.

16) 이 개념을 이용한 분석으로는 S.Bowles & H.Gintis,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tic Capitalism", *Politics & Society*, 11(1), 1982. A.Shaikh & A.Tonak, "The Welfare State and the Myth of the Social Wage", Cherry et. al.(ed.) *The Imperiled Economy*, Monthly Review Press, 1987 등이 있다.

J.A.Miller, "Social Wage or Social Profit - The Net Social Wage and the Welfare State", *RRPE*, Vol.21, No.3, 1989에서 위의 논자들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미국의 재정정책을 평가하고 있다.

17) Gough처럼 福祉國家를 포괄적으로 노동인구 또는 비노동인구 부양을 위한 국가권력의 사용이라고 정의하고(I.Gough, op.cit. 1990, p.66), 그래서 사회적 서비스지출을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 노동인구에 혜택이 돌아가는 모든 지출로 파악한다면(I.Gough, op.cit. 1975, pp. 72-73), 사회적 임금지출은 사회적 복지지출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며, 이렇게 볼 때, "純社會的 賃金"은 "純福祉財政便益"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18) J.A.Miller, op.cit., 1989, pp.88-89.

제논의의 적부에 대한 선형적 판단은 유보한 채,<sup>19)</sup> 실증분석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Gough, O'Connor, Miller 등의 이론틀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 財政構造와 蓄積過程사이에 나타난 相關性을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Miller 등의 純社會的 賃金의 개념을 이용하여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에서 나타나는 純社會的 賃金(純福祉財政便益)의 크기의 변화와 蓄積過程의 관계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Ⅲ. 財政構造와 資本蓄積過程

먼저 우리나라의 현실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생산성과 재생산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조세수입을 노동에 대한 조세와 자본에 대한 조세, 나아가서 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와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로 분류하여, 이러한 財政構造의 變化趨勢와 利潤率指標를 연계시켜 우리나라 財政構造의 變化趨勢와 資本蓄積過程 사이에 어떠한 相關性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sup>20)</sup>

19) 본 논문은 이들 사이의 이론적 논쟁에 가담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론틀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축적과정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뜻을 두고 있음을 밝혀둔다.

20) 국가가 재정을 통해 자본축적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개념상으로는 자료상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하 참고), 재정지출 및 조세수입의 구조와 이윤율사이의 상관성을 해명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고에서는 이윤율수준과 관련을 맺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한 고려를 일단 보류한 상태에서 재정구조와 이윤율과의 상관성에만 초점을 맞추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특정지출 또는 조세가 경제의 생산능력을 확장시키는 국가의 잠재적 능력을 키워 주어 궁극적으로는 축적을 촉진시킨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총괄적인 축적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윤율지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마르크스의) 이윤율에 대한 추정치는 정성진, “한국경제에서의 마르크스비율의 분석”(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원, 1990)과 김균, “한국의 자본축적과정과 노동운동”(『노동문제논집』, 제9집, 고대노동문제연구소, 1991)이 있는데, 정성진의 연구에서는 제조업분야와 비농업부문으로 나누어서 1970~1986년사이의 지표를 추정하고 있으며, 김균은 제조업분야에 한정해서 1966~1989년 사이의 지표를 추정하고 있다. 양자의 추정치는 절대크기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변동추세는 거의 일치하고 있어(정성진, 전제논문, p.164와 김균, 전제논문, p.343의 그림을 비교해 볼 것) 본 논문의 논리 전개상 어느 것을 써도 무리가 없으나 최근까지의 시계열자료의 사용을 위해 김균의 추정치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조업분야의 이윤율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데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제조업이 전 산업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정성진의 추정치를 보면 양부문의 이윤율이 절대치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 변동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정성진, 전제논문, p.164의 그림을 참고), 본 논문에서는 추세치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수치를 써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 1. 財政支出構造와 資本蓄積

먼저 Gough 등의 '間接적으로 生産的인 支出'<sup>21)</sup>과 利潤率과의 關係를 살펴 보면, 이 지출이 늘어나면 자본 또는 노동비용의 절감을 통해 利潤率이 높게 나타나는 관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관계와는 逆의 方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1〉과 〈그림 1〉 참고). 이와 같은 현상은 '간접적으로 생산적인 지출'이 자본비용 또는 노동비용의 감소를 통해 利潤率을 높히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는, 그 축적의 내적구조에 그것을 방해하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表 1〉 財政支出의 構成比와 利潤率 變化趨勢

단위 : %

	1부분	2부분	3부분	1+2	Prod.	Prof.
70	28.5	23.4	48.1	51.9	24.0	46.1
71-72	24.0	24.2	51.8	48.2	26.2	48.7
73-74	27.6	22.7	49.8	50.2	16.4	47.4
75-76	31.2	19.9	49.1	51.0	19.7	45.1
77-78	27.8	20.9	51.4	48.7	13.4	50.5
79-80	31.3	21.2	47.6	52.5	12.3	34.6
81-82	25.8	26.9	47.4	52.7	13.3	33.0
83-84	22.2	28.2	49.7	50.3	12.5	37.5
85-86	22.1	27.2	50.8	49.2	12.8	38.7
87-88	20.8	29.4	49.9	50.2	13.7	42.6
89-90	21.9	34.3	43.9	56.2	13.9	35.8

주) 1부분: 사회간접자본서비스와 경제적 원조, 2부분: 사회적 서비스, 3부분: 군사 및 집단서비스, 1+2부분: 간접적으로 생산적인 지출, Prod.: 생산적인 지출.

상기 각 지출부분의 수치는 해당부문 지출액을 중앙정부세출(및 순융자) 대비 비중으로 나타낸 것임.

주2) 각 지출부분의 구분은 〈부표 1〉 및 주 22)를 참고할 것.

주3) Prof.: 이윤율을 나타냄.

주4) 제시된 수치는 해당년도들의 평균치임.(〈부표1〉 참고).

단, 89-90년의 이윤율수치는 89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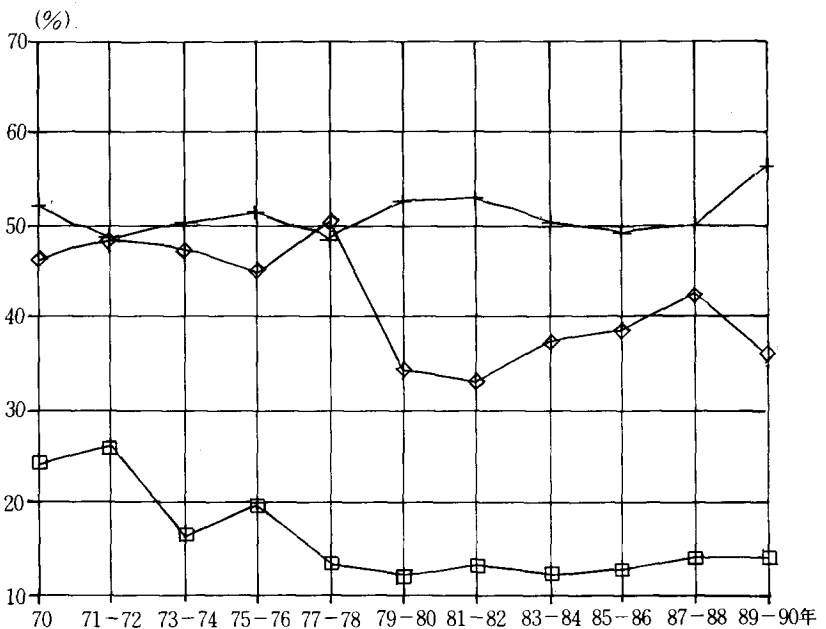
자료: 재무부, 『한국의 재정통계』, 각년도, 김균, 전계논문, p.359.

21) Gough는 사회간접자본서비스 및 경제적 원조 그리고 사회적 서비스부문의 지출을, O'Connor는 사회적 투자지출과 사회적 소비지출을 합쳐서 '간접적으로 생산적인 지출'로 분류하였다. 양자의 구분의 차이점은 O'Connor는 조직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비는 사회적 소비지출로 미조직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비는 사회적 소비지출로 분류하는데 비해, Gough는 조직 및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지출일체를 사회적 서비스라는 소위 2부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결과 각 부분별 절대치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이하 논의와의 연계를 위해 여기서는 Gough의 분류에 따른 수치로 분석하기로 하였다.(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항목구분은 〈부표1〉을 참고할 것).



이제 이러한 현상에 직면하여 財政支出構造와 利潤率 사이에 내재된 關聯性을 밝혀보기 위해 Rose, Miller 등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지출 중 生産的인 支出의 추세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자본재생산적인 지출과 노동재생산적인 지출의 변동추세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부지출 중 민간으로부터의 정부구입활동에 소요되어 잉여가치에 생산적인 작용을 하는 지출<sup>22)</sup>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자. <그림 1>을 보면 이 지출은 간접적으로 생산적인 지출의 경우와는 달리 다소의 기복은 있으나 약하게나마 利潤率과의 사이에 正의 相關關係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재정지출이 '간접적으로' 생산적인 작용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지만, 민간으로부터의 정부의 직접적인 구매활동은 가치를 갖는 상품을 생산하는데 쓰이고 더 나아가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데 약하게나마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間接적으로 生産的인 支出과 生産的 支出 그리고 利潤率



□ : 生産的인 支出, + : 間接적으로 生産的인 支出, ◇ : 利潤率

주) <표 1>의 수치로 작성한 것임.

22) 이 지출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민간으로부터의 구입에 쓰이는 생산적인 지출을 말하는 바, 여기서는 『韓國의 財政統計』(財務部) 자료의 '경제적 분류'에 나오는 '자본지출'을 代用變數로 쓰기로 하였다.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생산적인 지출’이 이윤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측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명해보기 위해, 이 지출을 자본재생산적 지출과 노동재생산적 지출로 나누어<sup>23)</sup> 검토해보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資本再生産的인 支出은 민간자본의 생산비용을 떨어뜨려 민간부문의 利潤率을 제고시키고, 勞動再生産的인 支出은 노동비용을 줄여주어 利潤率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인데, <표 1>과 <그림 2>를 보면 자본재생산적인 지출은 일반적인 논리와는 달리 이윤율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비해, 노동재생산적인 지출은 비록 약하게나마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간접적으로 생산적인 지출’의 구체적인 작용이 주로 자본재생산적인 지출의 작용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동재생산적인 지출은 70년대 초반의 중화학공업화정책 수행이래 강력한 노동운동의 통제속에 약한 노동세력이 노동재생산적인 지출을 통한 노동력재생산비의 감소를 감수해나감으로써 이 지출과 이윤율과의 상관관계를 정의 관계로 노정시켰지만,<sup>24)</sup> 자본재생산적인 지출은 그것이 곧바로 자본비용의 감소를 통해 이윤율의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메카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후자의 작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전반적으로 ‘간접적으로 생산적인 지출’이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국가의 자본재생산적 지출이 자본비용의 절감을 통해 이윤율의 상승을 가져오지

23) 이 구분은 전술한 바와 같이 Miller에 의한 구분인 바, 내용적으로는 Gough의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와 경제적 원조, 사회적 서비스의 구분과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여기서는 Gough의 분류에 따라 전자를 자본재생산적 지출로, 후자를 노동재생산적 지출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24) 노동재생산적 지출과 이윤율 사이의 이러한 정의 상관관계는 80년 전후시기와 87년 이후의 시기에는 역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표에 나타나듯이 70년대 말의 부마항쟁으로 이어지는 노동운동의 표출과정, 80년대 말의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노동재생산적 지출의 증가가 그대로 노동력재생산비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그 결과 노동재생산적 지출과 이윤율의 관계를 역의 관계로 전환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노동세력의 개략적인 지표로 조합원수와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추이를 보면 다음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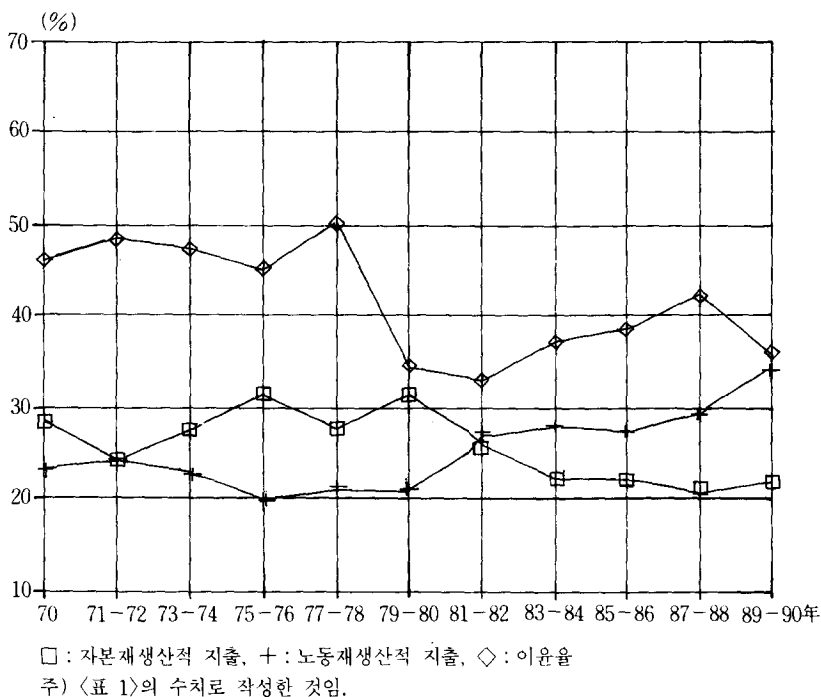
년	도	71-72	73-74	75-76	77-78	79-80	81-82	83-84	85-86	87-88	89-90
조합원수(천명)		506	602	798	1005	1018	976	1011	1020	1487	1910
노사분규 건수		-	-	122	99	256	137	106	271	2811	1616 <sup>a)</sup>

주) 해당년도들의 평균치임. 단 a)는 1989년 건수임.

자료 : 『노동경제연감』, 한국경영자총협회, 1984, 1990.

못했다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지출이 자본비용의 감소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누출되어 결국 축적능력을 감소시키는 특수한 蓄積構造가 우리사회경제구조에 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민간자본이 국가와의 강력한 결합하에 체질화된 前期的 蓄積論理 때문에 그러한 지출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누출되어 생산적인 부문에서의 축적능력 고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그림 2〉 資本 및 勞動에 대한 再生産的 支出과 利潤率



25) 본고에서 축적능력의 저하현상을 축적의 前期性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한편으로 우리사회 경제구조의 從屬性의 반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엄밀한 해명은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단지 여기서는 국가재정정책으로 인한 자본 축적의 잠재적 가능성이 잉여의 非生産的인 漏出現象에 의해 현실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하는 구조가 재정구조와 관련해서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 2. 租稅收入의 構造와 資本蓄積

이번에는 租稅와 利潤率과의 관계를 검토해보자. 먼저 <표 2>와 <그림 3>을 통해서 70년대 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자본에 대한 과세는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비해 노동에 대한 조세의 비중<sup>26)</sup>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편 두부분에 대한 비중의 상대적 크기를 보면 70년대는 자본에 대한 조세가 노동에 대한 조세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80년대로 들어가면서 노동에 대한 조세의 상대적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이들 조세구성의 변화와 이윤율의 변화를 관련지워 보면, 먼저 전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조세의 비중이 줄어들고 노동에 대한 조세의 비중이 늘어왔

&lt;表 2&gt; 租稅收入의 構成比와 利潤率 變化趨勢

단위 : %

	L.	P.L.	UP.L.	C.	NSW	Prof.
70	39.3	21.8	17.5	60.7	7.6	46.1
71-72	39.3	21.4	17.8	60.7	4.9	48.7
73-74	36.6	20.5	16.1	63.4	6.2	47.4
75-76	38.9	22.3	16.5	61.1	12.0	45.1
77-78	44.0	25.7	18.3	56.0	15.5	50.5
79-80	47.6	26.3	21.3	52.4	16.3	34.6
81-82	50.4	26.7	23.6	49.6	9.7	33.0
83-84	54.7	28.4	26.3	45.3	17.2	37.5
85-86	52.9	27.2	25.7	47.1	17.4	38.7
87-88	53.3	27.4	25.9	46.7	21.1	42.6
89-90	57.9	29.9	28.0	42.1	15.7	35.8

주1) L. : 노동에 대한 조세, P.L. : 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 UP.L. :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 C. : 자본에 대한 조세.

상기 각 조세부분의 수치는 해당부문 조세액이 중앙정부세입중의 전체조세수입(국세, 사회보장기여금, 가산금 포함)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난 것임.

주2) 각 租稅群의 구분은 <부표2> 및 주28)을 참고.

주3) NSW는 순사회적 임금(사회적 서비스지출-노동에 대한 조세)을 나타내는 바, 이 표의 해당 수치는 負로 나타나는 순사회적 임금의 절대치를 중앙정부세출 대비 비중으로 나타난 수치임.

Prof.는 <표1>과 같이 이윤율을 나타냄.

주4) 제시된 수치는 해당년도들의 평균치임. (<부표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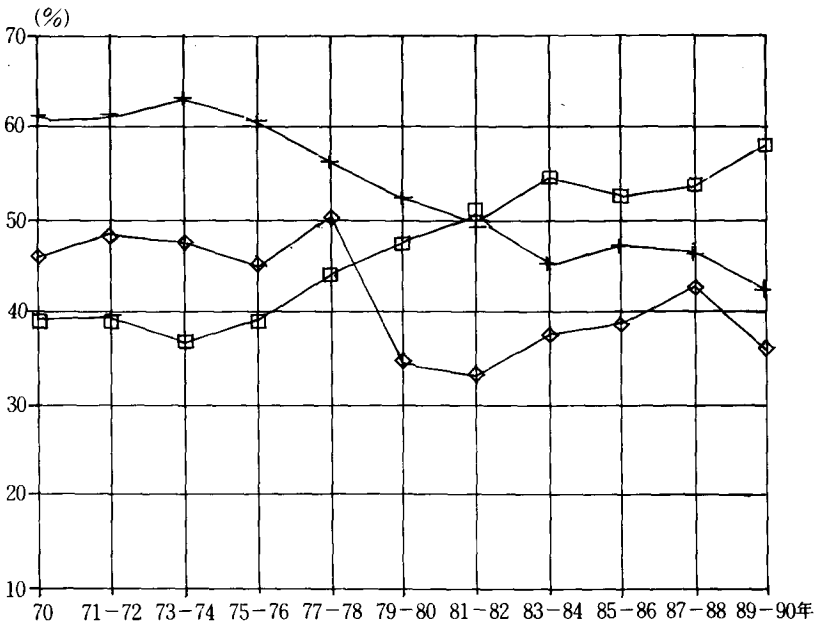
단, 89-90년의 이윤율수치는 89년 수치임.

자료 : <표1>의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26) 자본 및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의 비중은 租稅歸着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부표2>의 가정에 의해 조세부담을 산정하였다.

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이 하향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자본에 대한 조세비중이 줄어들면 잉여가치를 줄이는 폭을 줄여주어 이윤율의 제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노동에 대한 조세비중이 늘어나면 그것이 가변자본에 귀착되어 노동력재생산비를 떨어뜨림으로써 이윤율을 높히는 작용을 하는 것이 조세와 이윤율사이의 일반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그러한 관계가 거꾸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勞動과 資本에 대한 租稅와 利潤率



+: 자본에 대한 조세, □: 노동에 대한 조세, ◇: 이윤율  
 주) 〈표 2〉의 수치로 작성한 것임.

이러한 사실에 대한 해석은 몇가지 측면에서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출부문에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본에 대한 조세비중의 저하가 생산부문에서의 잉여의 제고 나아가서 이윤율의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비생산적으로 누출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경제의利潤率의 장기적인 低下의 傾向性으로 나타나는 축적기반의 약화현상이 잉여가

치 전유의 자본에 대한 과세에 바탕을 둔 조세체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문에 대한 과세비중의 저하가 전술한 지출부분의 작용논리와 연계되어 비생산적 축적논리를 강화시켜 잉여의 누출을 일반화시킨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자본에 대한 조세와 이윤율사이의 관계가 80년대 이후 부분적으로 역의 관계를 나타내보임으로써 정상적인 축적논리를 확보해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나<sup>27)</sup> 87년 이후 상황변화 과정에서도 오히려 정의 관계를 노정함으로써 아직은 건전한 축적논리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없게 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에 대한 조세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을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sup>28)</sup>으로 나누어서 노동에 대한 조세의 비중이 커가면서도 특히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커간다면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조세비중이 높아지더라도 이윤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노동일반의 경제적 작용이 불분명할 때 이를 생산적 노동, 비생산적 노동으로 나누어서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는 잉여가치에 대한 조세로 보고 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만 가변자본에 대한 조세로 파악하여 그 경제적 작용을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림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가 늘어나는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설명도 부분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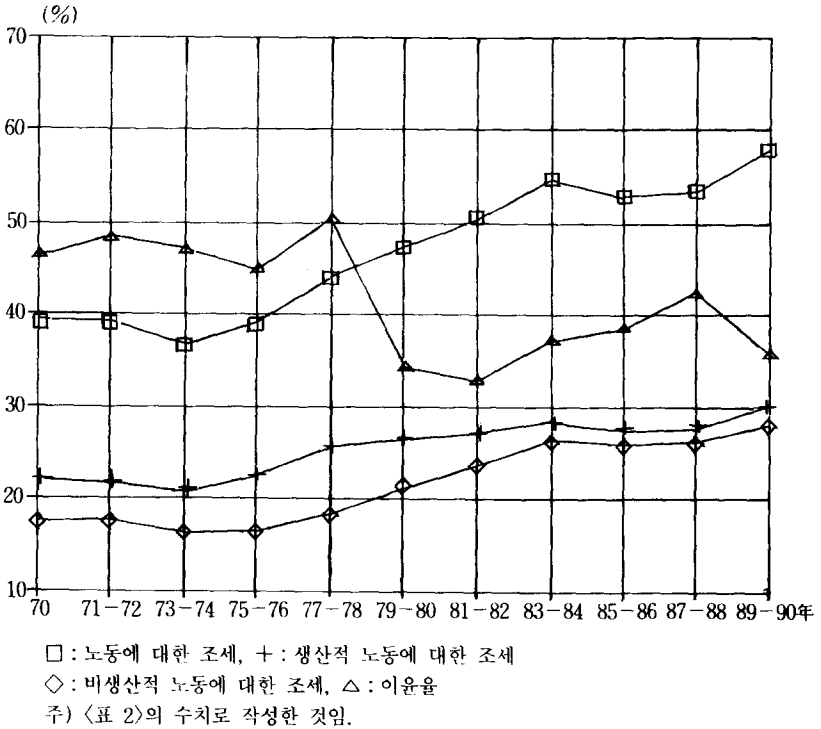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조세와 이윤율의 상관성은 보다 구체적인 국면별 비교에서는 지출부문 만큼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는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

27) 70년대 중반 종합소득세(75년), 부가가치세(77)의 시행으로 자본에 대한 과세가 큰 폭으로 줄어 들 때 이윤율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일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70년대는 전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과세와 이윤율은 정의 관계를 보임으로써 비정상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비해 80년대 접어들면서 보다 빈번하게 자본에 대한 과세와 이윤율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81-83년, 85-87년).

28) 밀러는 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를 노동에 대한 총조세중에서 피용자보수 대비 가변자본비중으로 구하였으며(J.A.Miller, op.cit, 1986, p.252 참고), 조연상은 피용자보수 중에서 광업 및 제조업종사자의 임금의 비중으로 산정하고 있다(조연상, 전제논문, p.214 참고). 본고에서는 생산적인 산업부문을 농업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으로 확장하여 이 부문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지표를 산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과 요소소득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1980년 이후만 발표되고 있어서 국내총생산 중 이들 산업부문의 비중을 대용 변수로 해서 계산하였다. 80년 이후 실제수치를 적용해서 구해본 결과 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비중의 추세는 두경우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서 이 대용변수를 사용하더라도 본 논문의 분석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은 지출부문은 이러한 양적 지표자체가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조세부문은 이러한 양적 지표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상관성의 해명에 는 부족함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sup>29)</sup>

〈그림 4〉 生産的 및 非生産的 勞動에 대한 租稅와 利潤率



#### Ⅳ. 純福祉財政便益과 資本蓄積

이제 한걸음 더 나아가서 社會的 貨金을 형성하는 노동재생산적인 지출과 노동에 대한 조세와의 사이에서 純福祉財政便益을 의미하는 純社會的 貨金<sup>30)</sup>을 산정하고, 이 지표의 변화추세와 利潤率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해보

29)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명을 위해서는(전반적인 과세비중뿐만 아니라)조세체계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여기서는 본 논문의 범위상 생략하기로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는 “우리나라 租稅體系의 特性分析 試論”, 『韓國租稅研究』 제7집, 한국조세학회, 1991년에서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역사적, 구조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축적논리의 前期性을 중요한 특질로 지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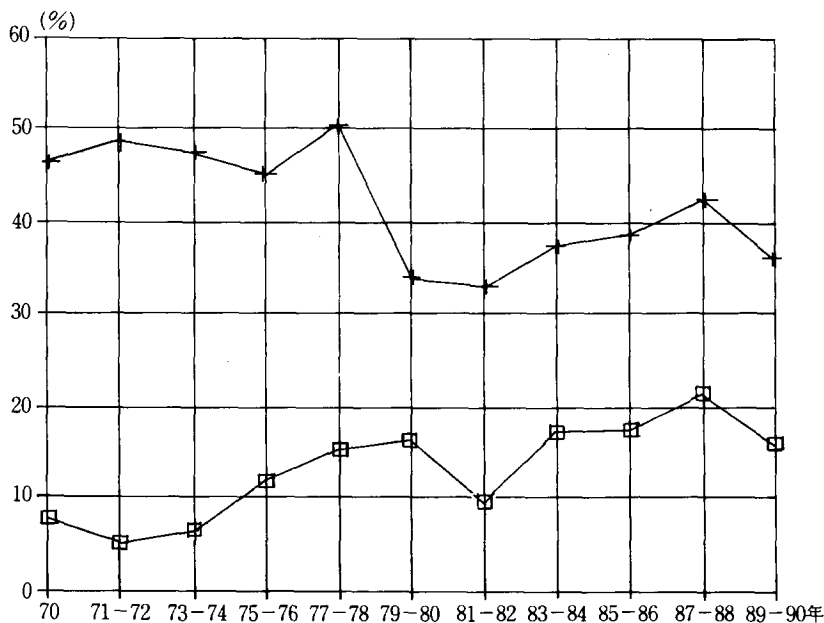
30) 주17) 참고.

고자 한다.

노동자들은 한편으로는 정부의 노동재생산적 지출을 통해서 사회적 임금을 형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에 대한 조세를 통해 그러한 사회적 임금부문이 삭감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양자의 관계 속에서 純社會的 賃金(NSW : Net Social Wage)의 크기가 형성된다.

이렇게 산정된 NSW의 크기는 한편으로는 정부활동의 총체적인 再分配效果를 나타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표 2>와 <그림 5>에 나타나고 있듯이 NSW가 줄곧 負의(negative) 수치로 나타나며 그 비중도 전반적으로 보면 꾸준히 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앞의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나듯이 80년대초반이래 노동재생산적인 지출의 비중이 자본재생산적인 지출의 비중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노동에 대한 조세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늘어나서 그 후 줄곧 NSW의 負의 크기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그간의 우리 사회의 분배불평등의 심화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87년이래 負의 정도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아직 노동에 대한 조세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NSW는 여전히 높은 負의 크기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純社會的 賃金과 利潤率



+ : 이윤율, □ : 순사회적 임금의 절대치 / 중앙정부세출 (%)

주) <표 2>의 수치로 작성한 것임.



한편 이러한 NSW의 부호나 절대적인 크기는 이와 같은 재분배적인 측면보다도 한 사회의 축적의 정도와 관련해서 보다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분배문제도 그것이 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은 자본주의사회를 유지시켜나가는 생산측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분배문제는 이러한 생산측의 문제로부터 파생되며 나아가서 생산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社會的 資金支出에 비해 노동에 대한 조세가 많아서 NSW가 負로 나타나면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려 축적을 촉진시키게 되고, 이러한 관계는 그 역도 성립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논리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림5>에 나타나고 있듯이 NSW의 부호가 負로 나타나고 그 상대적 크기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 利潤率을 높히는 작용을 해야 할 것이나, 전반적으로 이윤율은 하향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다같이 NSW가 負의 크기를 나타내더라도 負의 NSW의 크기의 상대적 변화와의 관계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관련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NSW의 상대적인 비중의 변화를 통해서 보면, 70년대는 전반적으로 NSW의 負의 크기의 비중이 줄어드는 때는 이윤율이 올라가고 늘어난 때는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며, 80년대 들어서면서는 NSW의 負의 크기의 상대적인 비중과 이윤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지출구조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앞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본재생산적 지출은 이윤율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비해, 노동재생산적 지출은 이윤율과의 관계에서 비록 약하기는 해도 일반적인 논리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작용의 반영으로 순사회적 임금과 이윤율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본재생산적 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던 70년대는 일반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양상을 드러내 보이고, 상대적으로 노동재생산적 지출의 비중이 더 높아진 80년대 초반이래는 일반적인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80년대 초반이래 負의 NSW의 상대적 크기가 커가면 이윤율도 늘어난 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한편 NSW의 負의 상대적 비중이 종전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을 때도 이윤율수준은 종전의 수준에도 다다르지 못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재생산적 지출과 이윤율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논리가 적용되어 더 높은 이윤율을 시현하고자 해도 자본에 대한 조세가 증가해서 이윤율의 상승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앞의 분석에 의하면 오히려 자본에 대한 조세비중은 80년대 이후 떨어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80년대이래 NSW의 負의 상대적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윤율이 종전보다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은 70년대 고착된 자본부문의 작용에 있어서의 비생산적 축적논리가 그대로 온존되어 노동재생산적 지출의 작용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노동세력을 약화시키면서 노동부문으로부터 이윤율을 올리려는 기도는 자본부문에서 장기적이고 정상적인 축적기반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그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V. 總括的인 評價

본 논문에서는 먼저 國家財政이 민간의 資本蓄積過程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구조를 검토하였다. 검토과정에서는 Marx를 뒀한 Orthodox Marxist들 그리고 그들에 가까운 Fundamentalist들과 이들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Neo-Marxist들의 서로 다른 견해를 부각시킴으로써 국가의 경제적 작용에 대한 이론구조를 보다 선명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노동자들의 생산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노동력가치에 대한 이론적 범주를 검토하고 그러한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재정지출과 조세구조가 민간자본에 대해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인 작용을 하는가에 관한 이론구조를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이론적 논의에 바탕을 두고 우리나라의 현실자료를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財政構造와 資本蓄積過程의 相關性을 분석해봄으로써 일반적 논리의 적용여부, 한국적 특수성 등을 해명하였다.

분석결과 간접적으로 생산적인 정부지출과 이윤율의 관계는 일반적인 논리와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또한 자본재생산적 지출과 이윤율의 관계도 일반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생산적인 지출, 노동재생산적인 지출 등과 이윤율의 상관관계는 약하지만 일반

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조세부문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양부문 모두 일반적인 논리와는 역의 작용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으나 국면별 상관성은 지출부문처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나아가서 순사회적 임금(순복지재정편익)의 경우는 그 부호는 줄곧 負로 나타나고 그 크기는 절대적 규모로 보나 상대적 비중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상승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윤율은 하강하고 있었다. 나아가서 상대적인 비중의 변화로 보면 자본재생산적 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던 70년대는 순사회적 임금과 이윤율의 관계에 일반적인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재생산적인 지출의 비중이 더 높아진 80년대 초반이래는 일반적인 논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고도성장과정에서 고착된 자본부문의 작용에 있어서의 비생산적인 축적논리가 그대로 온존되어 80년대 초반이후 NSW의 負의 크기가 종전수준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은 종전수준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축적기반의 약화현상은 잉여가치 전유의 자본에 대한 과세에 바탕을 둔 租稅體系의 형성이라든가 자본지출의 과소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의 상황,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양적 측면의 이면에 내재된 왜곡된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전기적인 축적논리를 강화시켜 잉여의 누출을 일반화시켜온데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 노동재생산적인 지출은 노동세력의 약세에 근거하여 이윤율을 올리는 힘으로 작용해왔으나 자본부문의 작용에 있어서 온존하고 있는 前期性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충분히 가동시키지 못하여 그러한 작용도 크게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7년이래의 변화양상은 상대적으로 강화된 노동세력의 힘에 의해 노동에 대한 조세나 노동재생산적 지출이 노동력재생산비를 떨어뜨리지 못해 이윤율을 올리지 않는 쪽으로 작용한 양상이 눈에 띄이나, 이윤율하강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동안 우리체제에 온존·강화되어온 負의 NSW體制의 構築過程에서 前近代的 蓄積論理가 체제적으로 안착되어 자본에 대한 과세와 자본재생산적인 지출이 이윤율을 올리는 쪽으로 작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볼 때 결국 財政變數의 民間經濟에 대한 作用이라는 것도 순수한 경제논리로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

의 결과 결국 우리 사회구성원의 삶의 터전으로서 우리 사회의 발전은 대중적 통제를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에 의해 형성된 조기독점적인 전기적 제요소들에 대한 제거를 통해서 그 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參 考 文 獻

1. 金 均, “韓國의 資本蓄積過程과 勞動運動”, 『勞動問題論集』, 제9집, 고대노동문제연구소, 1991.
2. 禹明東, “國家財政危機現象에 대한 理論的 檢討”, 『퇴경 조용범박사화갑기념논총』, 풀빛출판사, 1991.
3. 禹明東, “우리나라 租稅體系의 特性分析 試論”, 『韓國租稅研究』, 제7집, 韓國租稅學會, 1992.
4. 李載殷, “現代資本主義構造變化와 財政危機의 進展”, 『財政論集』, 제2집, 韓國財政學會, 1988.
5. 정성진, “한국경제에서의 마르크스비율의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대학원, 1990.
6. 趙沈相, “韓國 財政赤字에 관한 研究”, 『財政論集』, 제5집, 韓國財政學會, 1991.
7. 조원희, “자본축적과 경기순환에 있어서 국가재정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고찰”, 『역사와 사회』, 제2집, 한울, 1984.
8. B.Fine & L.Harris, “State Expenditure in Advanced Capitalism : A Critique”, *New Left Review*, No.98, 1976, p.106.
9. I.Gough, “State Expenditure in Advanced Capitalism”, *New Left Review*, No.92, 1975.
10. I.Gough,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The Macmillan Press, 1981, 김연명 외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학』, 한울, 1990.
11. J.A.Miller,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Reconsidered : Two Views of the State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in the Post-war Economy”,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18, No. 1&2, 1986.

12. J.A.Miller, "Social Wage or Social Profit-The Net Social Wage and the Welfare Stat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 21, No.3, 1989.
13. J.O'Connor,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St. Martin's Press, 1973, 禹明東譯, 『現代國家의 財政危機』, 이론과 실천, 1990.
14. J.O'Connor, "Some Reflective Criticisms on Mosley's "Critical Reflections on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11, No.3, 1979, p.63.
15. R.Friedland and J.Sanders, "Private and Social Wage Expansion in the Advanced Market Economies", Edited by S.Zukin & P. Dimaggio, *Structures of Capital-The Social Organization of the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16. S.Bowles, D.M.Gordon, T.E.Weiskopf, "The Social Structure of Accumulation and the Profitability of the Post War U.S.Economy",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18, No. 1&2, 1986.
17. Stephen Rose, "On Classifying State Expenditur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9, No.4, 1977.
18. Won-Hee Cho, *Value-theoretic Approach to The Dynamics of Competition, Monopoly-Capital, and The State*, Hanul Academy Publishing Co., 1990 (Thesis submitted for the Degree of Ph.D. in Economics, University of London).

〈부표 1〉 歲出項目分類基準

J.O'Connor	세출 항목	I.Gough	세출 항목
사회적 투자지출	대학, 기술교육 주택사회개발 중 주택제외 (위생정화, 지역사회개발) 기타지역사업 * $Y_K$ 경제사업 SOC 이외 경제사업 SOC * $Y_K$ 기타경제사업 * $Y_K$	사회간접 자본서비스 및 경제적 원조 (1부문)	대학, 기술교육 경제사업 전반
사회적 소비지출	초중등교육 보건 사회보장복지 중 사회보장 주택사회개발 중 주택 기타지역사업 * $Y_L$ 경제사업SOC * $Y_L$ 기타경제사업 * $Y_L$	사회적서비스 (2부문)	초중등교육 보건 사회보장복지 주택사회개발사업 기타지역사업
사회적 손비지출	일반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복지 중 사회복지 기타	군사 및 집단적서비스 (3부문)	일반공공행정 국방 기타

주1) J.O'Connor 및 I.Gough의 세출항목의 구분은 J.O'Connor(1973), J.Miller(1986)를, I.Gough의 개념에 적합한 세출항목의 구분은 I.Gough(1975, 1981)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주2) 세출 항목은 우리나라 중앙정부세출의 기능적 분류에 나오는 항목 중에서 각각의 개념에 해당되는 항목을 나타내고 있음. 독자의 편의를 위해 혼란이 예상되는 몇몇 항목구분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니 참고바람.

#### 1) “교육”항

대학교육 및 기술교육은 민간의 자본비용을 줄여서 노동력의 생산성을 높힘으로써 이윤율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초중등교육은 노동비용의 저하를 통해서 민간의 노동력재생산비를 떨어뜨림으로써 이윤율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전자는 사회적 투자지출로 후자는 사회적 소비지출로 분류하였음.

#### 2) “주택”항

주택항은 직접 민간의 자본비용을 줄여주는 측면보다는 노동의 재생산을 위한 일종의 가변자본비용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소비지출에 포함시켰음.

#### 3) “사회보장”항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시혜의 범위가 주로 조직노동자에 국한되었던 사실에 유념하여 사회보장비는 조직노동자의 노동력의 재생산비를 떨어뜨림으로써 이윤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사회적 소비지출로 처리하였으며, 이에 비해 주로 영세민 구호대책비 등으로 쓰인 사회복지비는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정당화기능에 소요되어 비생산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적 손비로 처리하였음.

I.Gough는 제2부문에 대한 지출을 조직노동자의 노동력의 재생산을 수정하고 또 비노동과잉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모든 지출로 파악함으로써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비를 개념상 분리하지 않았음.

주3) 勞動所得分配率( $Y_L$ )은 국민소득중에서 파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被傭者報酬率을 사용하였으며, 資本所得分配率( $Y_K$ )은 그 殘餘項으로 하였다.

O'Connor 基準에 의한 歲出分類

금액(단위) : 억원

	Social Invest.	Social Consum.	SI+SC	Social Expense	총세출
1970	1102	1332	2434	2253	4687
1971	1013	1566	2579	2906	5485
1972	1485	2201	3686	3776	7462
1973	1348	2042	3390	3822	7212
1974	3536	2898	6434	5596	12030
1975	4925	4172	9097	8556	17653
1976	6115	6566	12681	12508	25189
1977	7754	8407	16161	16583	32744
1978	10192	10902	21094	22986	44080
1979	17214	15310	32524	27376	59900
1980	18615	20143	38758	38062	76820
1981	23123	30852	53975	47923	101898
1982	22367	38357	60724	55668	116392
1983	22249	38195	60444	61557	122001
1984	24537	43634	68171	66275	134446
1985	29339	45638	74977	73693	148670
1986	28406	46315	74721	84546	159267
1987	33235	55544	88779	93022	181801
1988	41575	64097	105672	103142	208814
1989	49512	89058	138570	118202	256772
1990	61933	128144	190077	142885	332962

구성비 : %

	Social Invest.	Social Consum.	SI+SC	Social Expense	합 계
1970	23.5	28.4	51.9	48.1	100
1971	18.5	28.6	47.0	53.0	100
1972	19.9	29.5	49.4	50.6	100
1973	18.7	28.3	47.0	53.0	100
1974	29.4	24.1	53.5	46.5	100
1975	27.9	23.6	51.5	48.5	100
1976	24.3	26.1	50.3	49.7	100
1977	23.7	25.7	49.4	50.6	100
1978	23.1	24.7	47.9	52.1	100
1979	28.7	25.6	54.3	45.7	100
1980	24.2	26.2	50.5	49.5	100
1981	22.7	30.3	53.0	47.0	100
1982	19.2	33.0	52.2	47.8	100
1983	18.2	31.3	49.5	50.5	100
1984	18.3	32.5	50.7	49.3	100
1985	19.7	30.7	50.4	49.6	100
1986	17.8	29.1	46.9	53.1	100
1987	18.3	30.6	48.8	51.2	100
1988	19.9	30.7	50.6	49.4	100
1989	19.3	34.7	54.0	46.0	100
1990	18.6	38.5	57.1	42.9	100

## Gough基準에 의한 歲出分類

금액(단위) : 억원

	1 부 문 지 출	2 부 문 지 출	1+2부문 지 출	3 부 문 지 출	총세출
1970	1338	1096	2434	2253	4687
1971	1190	1389	2579	2906	5485
1972	1962	1724	3686	3776	7462
1973	1565	1825	3390	3822	7212
1974	4024	2410	6434	5596	12030
1975	5678	3419	9097	8556	17653
1976	7579	5102	12681	12508	25189
1977	9167	6994	16161	16583	32744
1978	12101	8993	21094	22986	44080
1979	20553	11971	32524	27376	59900
1980	21730	17093	38823	37997	76820
1981	27750	26305	54055	47843	101898
1982	28238	32638	60876	55516	116392
1983	27881	32728	60609	61392	122001
1984	28767	39615	68382	66064	134446
1985	35563	39936	75499	73171	148670
1986	32129	43686	75815	83452	159267
1987	35895	53423	89318	92483	181801
1988	45535	61468	107003	101811	208814
1989	54686	85259	139945	116827	256772
1990	75029	117386	192415	140547	332962

구성비 : %

	1 부 문 지 출	2 부 문 지 출	1+2부문 지 출	3 부 문 지 출	합 계
1970	28.5	23.4	51.9	48.1	100
1971	21.7	25.3	47.0	53.0	100
1972	26.3	23.1	49.4	50.6	100
1973	21.7	25.3	47.0	53.0	100
1974	33.4	20.0	53.5	46.5	100
1975	32.2	19.4	51.5	48.5	100
1976	30.1	20.3	50.3	49.7	100
1977	28.0	21.4	49.4	50.6	100
1978	27.5	20.4	47.9	52.1	100
1979	34.3	20.0	54.3	45.7	100
1980	28.3	22.3	50.5	49.5	100
1981	27.2	25.8	53.0	47.0	100
1982	24.3	28.0	52.3	47.7	100
1983	22.9	26.8	49.7	50.3	100
1984	21.4	29.5	50.9	49.1	100
1985	23.9	26.9	50.8	49.2	100
1986	20.2	27.4	47.6	52.4	100
1987	19.7	29.4	49.1	50.9	100
1988	21.8	29.4	51.2	48.8	100
1989	21.3	33.2	54.5	45.5	100
1990	22.5	35.3	57.8	42.2	100

주) 우리나라 중앙정부 세출(및 순융자)을 상기 수준에 따라 분류한 수치임.

자료 : 재무부, 『한국의 재정통계』, 각년도로부터 작성.



〈부표 2〉 租稅歸着에 대한 假定

	노동에 대한 조세	자본에 대한 조세
소득세, 소비세군 유통세군, 기타	세수총액 * $Y_L$	세수총액 * $Y_K$
재산세군	세수총액(상속세분 제외) * $1/2 * Y_L$	세수총액(상속세 제외) * $1/2$ + 세수총액 * $1/2 * Y_K$
상속세	0	세수총액
사회보장기여금	피용자부담금 + 고용자부담금 * $Y_L$	고용자부담금 * $Y_K$

- 주1) 법인세를 전액 전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든 소득세군의 세수는 그 중 노동소득분배율( $Y_L$ )만큼 노동에 대한 조세, 자본소득분배율( $Y_K$ )만큼을 자본에 대한 조세로 하였다.
- 주2) 소비세군, 유통세군의 세수도 그 중 노동소득분배율만큼은 노동에 대한 조세, 자본소득분배율만큼은 자본에 대한 조세로 하였다.
- 주3) 상속세를 제외한 재산세군의 조세는  $1/2$ 이 전가된다고 가정하여, 세수총액의  $1/2$ 중 노동소득분배율만큼을 노동에 대한 조세로, 나머지  $1/2$ 과 전가되는 세수분 중 자본소득분배율만큼을 자본에 대한 조세로 하였다.
- 주4) 재산세군의 상속세는 전액 자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주5) 사회보장기여금 중 피용자부담금 부분은 전액 노동에 대한 조세로, 고용자부담금 부분은 전액 전가된다고 가정하여, 그 중 노동소득분배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노동에 대한 조세로 자본소득분배율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자본에 대한 조세로 간주하였다.

勞動 및 資本에 대한 租稅

금액(단위) : 억원

	L.	P.L.	UP.L.	C.	합 계
1970	1451	804	647	2239	3690
1971	1799	982	817	2778	4577
1972	1892	1033	859	2930	4822
1973	2173	1223	949	3687	5860
1974	3331	1859	1472	5908	9239
1975	5341	3050	2291	8721	14062
1976	8411	4870	3541	12755	21166
1977	11198	6484	4714	15372	26570
1978	16972	10013	6958	20050	37022
1979	22275	12786	9489	26098	48373
1980	28930	15420	13510	30039	58969
1981	34926	18825	16101	38720	73646
1982	45467	23825	21642	39832	85299
1983	56085	28996	27089	45990	102075
1984	60254	31392	28862	50518	110772
1985	65796	33885	31911	55257	121053
1986	71297	36576	34722	67525	138822
1987	87419	44496	42923	79479	166898
1988	110619	57301	53319	93275	203894
1989	127263	65668	61595	96673	223936
1990	167239	86295	80944	116387	283626

구성비 : %					
	L.	P.L.	UP.L.	C.	합 계
1970	39.3	21.8	17.5	60.7	100
1971	39.3	21.5	17.8	60.7	100
1972	39.2	21.4	17.8	60.8	100
1973	37.1	20.9	16.2	62.9	100
1974	36.1	20.1	15.9	63.9	100
1975	38.0	21.7	16.3	62.0	100
1976	39.7	23.0	16.7	60.3	100
1977	42.1	24.4	17.7	57.9	100
1978	45.8	27.0	18.8	54.2	100
1979	46.0	26.4	19.6	54.0	100
1980	49.1	26.1	22.9	50.9	100
1981	47.4	25.6	21.9	52.6	100
1982	53.3	27.9	25.4	46.7	100
1983	54.9	28.4	26.5	45.1	100
1984	54.4	28.3	26.1	45.6	100
1985	54.4	28.0	26.4	45.6	100
1986	51.4	26.3	25.0	48.6	100
1987	52.4	26.7	25.7	47.6	100
1988	54.3	28.1	26.2	45.7	100
1989	56.8	29.3	27.5	43.2	100
1990	59.0	30.4	28.5	41.0	100

주1) L. : 노동에 대한 조세, P.L. : 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

UP.L. : 비생산적 노동에 대한 조세, C. : 자본에 대한 조세

주2) L., C. 등은 앞표의 기준에 의해 계산한 것임.

P.L., UP.L. 등은 본문 주28)에 따른 것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로부터 작성.

(負)純社會的 資金(Negative Net Social Wage)

단위 : 억원, %

	L.T.	L.E.	NSW	중앙세출	NSW(%)
1970	1451	1096	355	4687	7.6
1971	1799	1389	410	5485	7.5
1972	1892	1724	168	7462	2.3
1973	2173	1825	348	7212	4.8
1974	3331	2410	921	12030	7.7
1975	5341	4319	1922	17653	10.9
1976	8411	5102	3309	25189	13.1
1977	11198	6994	4204	32744	12.8
1978	16972	8993	7979	44080	18.1
1979	22275	11971	10304	59900	17.2
1980	28930	17093	11837	76820	15.4
1981	34926	26305	8621	101898	8.5
1982	45467	32638	12829	116392	11.0
1983	56085	32728	23357	122001	19.1
1984	60254	39615	20639	134446	15.4
1985	65796	39936	25860	148670	17.4
1986	71297	43686	27611	159267	17.3
1987	87419	53423	33996	181801	18.7
1988	110619	61468	49151	208814	23.5
1989	127263	85259	42004	256772	16.4
1990	167239	117386	49853	332962	15.0

주) L.T. : 노동에 대한 조세, L.E. : 노동재생산적 지출

NSW : (負)純社會的 資金, NSW(%) : 중앙정부세출대비 비중을 나타냄.